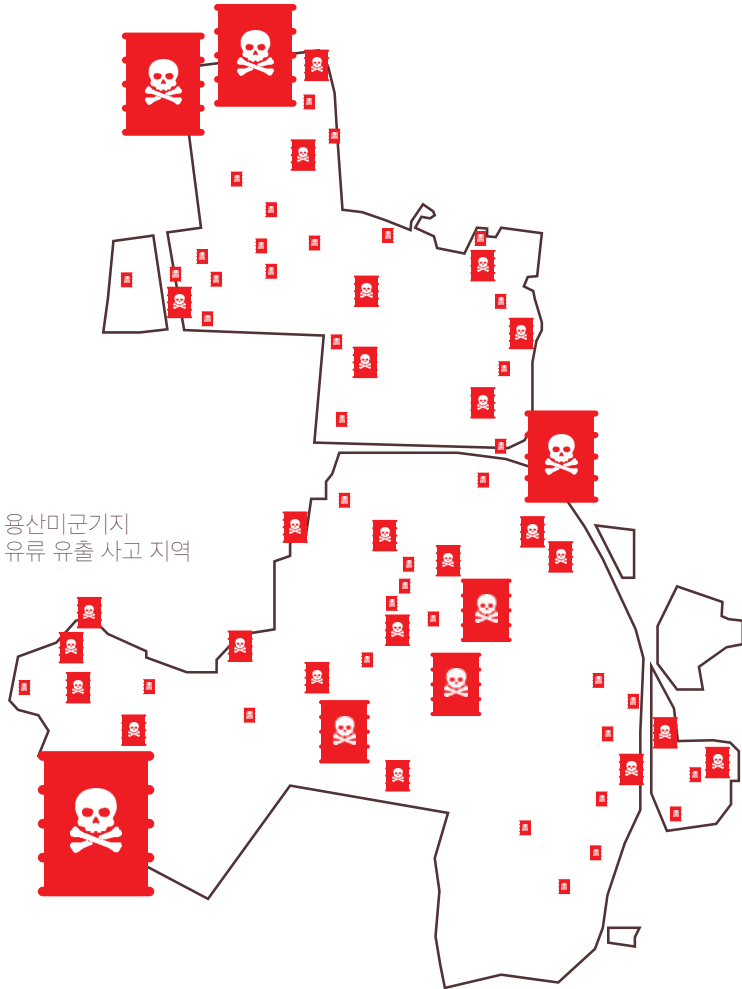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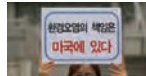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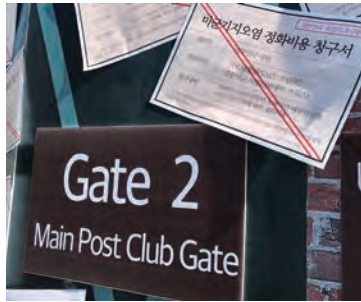


용산미군기지 반환 어디까지 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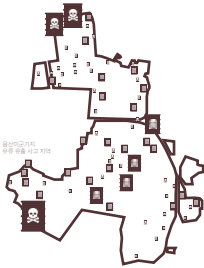


용산미군기지 안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준)



차례

1. 용산미군기지	2
2. 용산기지 반환일지	4
3.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오염조사	5
1) 용산기지 반환협상 개시	
2) 용산기지 반환 어디까지 왔나	
3) 빨리 반환받기만 하면 된다?	
4. 단일기지로는 최대규모 오염	11
1) 용산미군기지 90건의 기름유출	
2) 밀빠진 독에 물붓기	
3) 2015,16년 내부오염조사	
4) 2020년 환경조사 보고서 공개	
5. 오염은 주한미군이, 정화는 한국정부가	16
1) 키세란?	
2)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	
3) 독일보충협정은 달랐다!	
6. 미군기지는 성역이 아니다	19
7.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20
1) 원상복구의 의무	
2) 정보공개	
3) 정화의 기준	
8. 누더기공원을 만들것인가	23
1) 공원 한가운데 미군 호텔이 있다	
2) 미대사관 이전	
한미SOFA운영체계	25
서울대책위 활동일지	26



용산미군기지 반환 어디까지 왔나?

1

용산미군기지

용산은 예로부터 남산과 한강에 인접해 있어 한양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지였다. 이에 군사 요충지로서 조선 초기 수군의 주둔지가 되었고, 군수 물자를 관리하는 군사감도 위치했다.

외국군 주둔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3세기 고려를 침입한 몽고군이다. 이후 임진왜란 때에는 일본군이, 임오군란 때에는 청나라가, 청일전쟁 때에는 다시 일본군이 주둔하였다. 일본은 러일전쟁때 용산을 군사기지화하였다. 해방 이후 미 24군단 7사단 병력은 일본군이 사용하던 용산기지에 들어왔고 미군의 주둔은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서울 지역 내 미군 시설 중 용산 미군기지는 보통 본체부지(배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와 산재부지(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등)를 일컫는다.



구분 및 위치	면적	역할	반환여부
① 메인포스트 용산구 용산동 1가 1일대	827,162.5㎡	주한미군 행정의 중심, 지하병커 등 지휘통제시설	반환협상중
② 사우스포스트 용산구 용산동 6가 1-1일대	1,812,596.7㎡	주택단지와 학교, 121병원 등 미군을 위한 편의시설	반환협상중
③ 캠프킴 용산구 한강로 1가 1-1일대	48,398.7㎡	육군 특별작전본부 USO(미국위문센터)	반환협상중
④ 유엔사 용산구 이태원동 22-34일대	51,753㎡	유엔군정전위원회가 사용 각국 연합군 사무실	반환완료
⑤ 수송부 용산구 동빙고동 7일대	78,992.9㎡	주유소 및 수송부 시설	반환협상중
⑥ 501정보대 용산구 서빙고동 235-11일대	5,240.4㎡	주한미군 501정보부대	반환협상중
⑦ 니블로막사 및 한남빌리지 용산구 한남동 698일대	94,234.8㎡	미군가족 임대주택과 편의시설	반환협상중
⑧ 미8군종교휴양소 용산구 한남동 726-156일대	20,743.8㎡	종교 휴양소	반환협상중
⑨ 캠프모스 용산구 남산도시공원 내	29,700㎡	통신시설	반환협상중
⑩ 극동공병단 중구 방산동 70일대	44,965.8㎡	주한미군 각종 공사담당	반환협상중
⑪ 성남골프장 송파구 장지동 494-2일대	929,379㎡	미군 골프장	반환협상중
⑫ 캠프그레이 동작구 대방동 340-3일대	8,642.7㎡	육군 수리정비소	반환완료

2

용산미군기지 반환일지

- 1945.9 일본군이 주둔하던 용산기지에 주한미군이 접수해 주둔함.
- 1953.10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1966.7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체결.
1988. 노태우 정부, 용산미군기지와 미대사관 이전 계획 공표
1989. 서울시, 용산 부지 전체를 민족공원화 한다는 계획 발표
- 1990.6 한미 양국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기본합의서/ 양해각서 교환.
"이전비용을 한국 정부가 전액 부담하되 토지 소요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1996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다"고 합의
- 1991.7 용산미군기지 이전 계획에 대한 구체적 원칙 합의안 발표. 이전비용 17억 달러 산정
- 1991.9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 내 미대사관 용도 8만평 제외해 달라고 주장
이전비용 1백억 달러 주장, 민자당 발표 이전비용 추정액 2조 4천억원(30억 달러).
- 1992.4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2000년으로 연기하자고 주장.
- 1992.11 미군 골프장으로 사용하던 9만 평을 반환받아 용산가족공원 개장
- 1993.6 국방부 평택기지 주변 터 매입 취소, 기지 이전이 2000년 이후로 사실상 연기
- 2001.12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 내 대규모 아파트 건립계획(1,066가구) 발표
아파트 건립 문제 대두로 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 재추진을 위한 협의 시작
- 2003.4 용산미군기지 평택 이전 발표, 주한미군은 500만평 신설 확장 부지 요구.
- 2003.5 한미정상은 용산미군기지 조기 이전 및 미 2사단 재배치 원칙 합의.
- 2004.10 용산기지이전협정(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서명.
- 2004.12 용산기지이전협정(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국회 비준.
- 2005.7 미대사관 청사 이전에 관한 한미정부간 양해각서 체결(캠프코이너 23,939평)
- 2005.12 용산 민족·역사 공원 건립추진위원회 발족
- 2007.7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정.
- 2011.5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 고시하면서 미대사관 이전부지 규모 확장하여 결정
- 2014.10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전작권 환수 연기 결정, 한미연합사 잔류 결정
- 2016.12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2018년 말까지 연장
- 2017.7 미8군 사령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
- 2017.10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연합사의 국방부 이전 양해각서 서명
- 2018.6 주한미군사령부, 유엔사령부 캠프 험프리스 이전 완료
- 2019.6 한미국방장관회담, 한미연합사 캠프 험프리스 이전 합의
- 2019.8 청와대 NSC 상임위, 용산미군기지 연내 반환 발표
- 2019.9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용산기지 정화와 비용부담은 한국 몫이라고 주장
"만약 한국이 당장 그 기지들을 원한다면, 현 상태로 수용하고 토양오염 등에 대한 해결 책임을 지게 될 것"
- 2019.12 제200차 한미SOFA합동위원회를 열어 용산미군기지의 반환 협의 개시 발표

3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오염조사

1) 200차 한미소파 합동위 반환협상 개시 발표

정부는 2019년 12월 11일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넘겨받고,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를 개시한다는 발표를 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미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으나 그동안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미국의 오염정화 책임을 받아 낸 적이 없었으며, 그 정화비용은 온전히 우리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을 마치 미국의 오염정화 책임을 따질 수 있는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

이번 협상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관철하지 못한채 진행된 굴욕적인 굴욕협상이며,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된 비밀협상이었다.



◀ 200차 한미SOFA합동위 발표 규탄 기자회견 (2019.12.12/외교부 앞)

2) 용산미군기지 반환 어디까지 왔다

현재 용산미군기지는 미군기지 반환절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기술용역을 준 한국환경수도연구원과 서울대산학협력단을 통해 환경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완료된 일부 구역에서만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21대 국감에서 확인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환경조사 구역만 공개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장조사가 진행되는지 알수 없는 것은 바로 한미 SOFA 규정 때문이다.



▲ 용산미군기지 현장조사 지역

정보공개청구



[인터넷청구바로가기](#) > [정보공개청구서서식 다운로드](#) >

공동환경평가 준비단계 회의결과

**「SOFA 환경분과위 설립에 관한 SOFA
합동위원회 각서(93.7.16)」에 따라 비공개**

- ◇ SOFA 환경분과위 설립에 관한 SOFA 합동위원회 각서(93.7.16)
- 환경분과위원회의 공식 합의록 및 기타 문서는 양국 정부의 공식문서로 간주하며, 환경분과위원회 및 그 구성원이 공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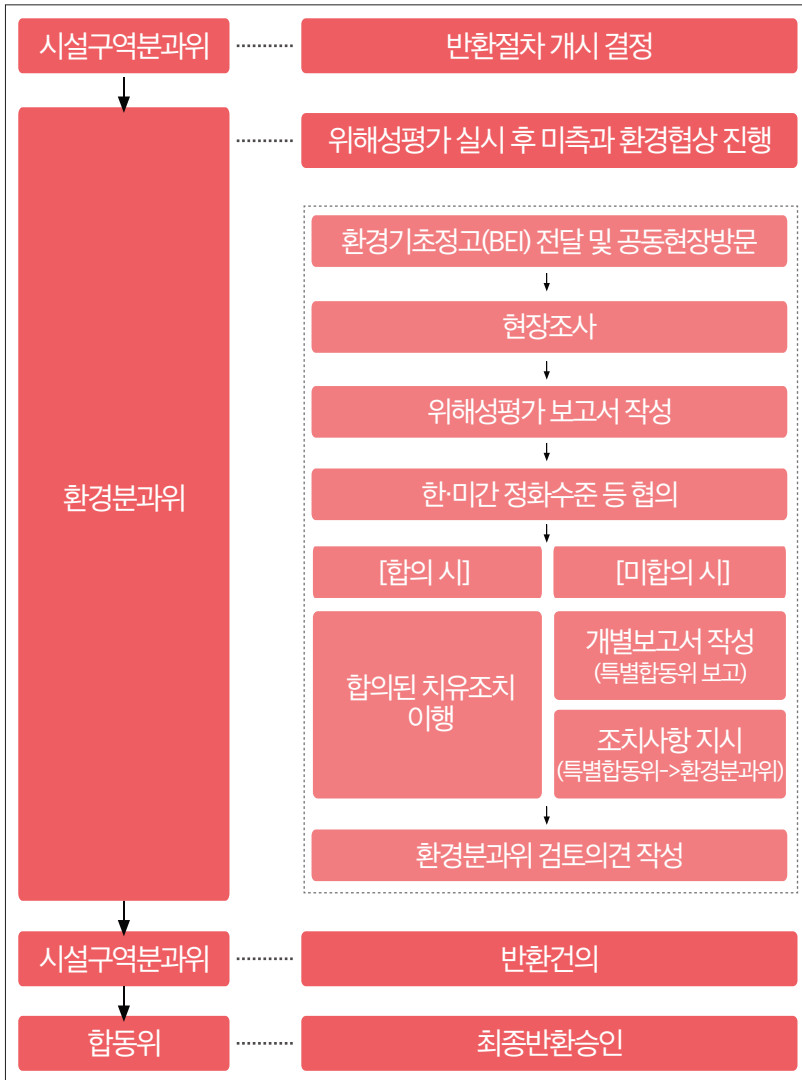
▲ 용산주민모임이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답변

한미SOFA의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5항과 부속서 A 7항에 따르면, "본 절차에 의한 어떠한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한 정보 배포 또는 본 절차에 의하여 수행된 특정 정보 교환 및 조사 정보 배포는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주한미군의 승인없이 정보 확인이 어렵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위 한미SOFA 부속법령은 법률이 아니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규범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관련 환경정보의 공개를 명하고 있다.

조금 후면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인 만큼 확립된 판례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장조사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 미군기지 반환절차

3) 빨리 반환받기만 하면 된다?

지난 2018년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계획된 옛 유엔사부지에서 유류오염이 발견되었다. 유엔사부지는 2006년에 반환되고 2011년 정화작업이 완료된 곳으로 유엔사부지 뒤 청화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류오염이 발견되어 농어촌공사가 정화를 했던 곳이다.



춘천의 캠프 페이지 역시 지난 2011년 토양 정화를 했으나 정화를 완료한 부지에서 최근 기름층 토양 및 오염된 기름통 수십개가 발견되는 등 당시 정화작업이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추가 정화비만 136억...또 우리가 부담? JTBC 2019.4.7 ▲

이번에 기름통이 발견된 지점은 부대 주둔 당시 활주로와 격납고 사이로, 국방부와 환경공단이 오염되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해 정화 작업을 하지 않은 땅이다. 이는 미군측이 상세한 부지사용에 대한 내역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지내 전체 전수조사 없이는 제대로 된 정화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춘천 옛 미군기지 터에 매립된 유류통 ▲

이처럼 미군측의 비협조로 인해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와 정화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0년 부산 하야리아 기지 반환과정에서는 ‘선반환-후치유’라는 예외까지 적용하며 급하게 반환협상을 추진하면서 부산시민공원을 조성하였다. 예상 정화비용이 3억원이었으나 실제 정화과정에서는 50배가 늘어난 143억이 들었다.



이처럼 미군기지는 빨리 반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오염을 조사하고 정화하는 것이다.

◀ JTBC 2020.10.15

반환된 미군기지... 땅 파면 기름 '등등'. 유전처럼 활활

더욱이 최근 4개 기지 반환합의 등 미군과의 정화협상이 완료되기도 전에 반환이 결정되어 향후 반환 기지에 대한 오염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정부는 2020년 8월부터 장교숙소부지를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용산공원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오염조사와 정화는 하지않고 겉만 번지르한 용산공원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116년만에 온전한 용산기지의 반환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속이는 일이 될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내 장교숙소부지에서 열린 '함께 그리는 용산공원 부분개방 행사' 2020.7 ▲

4

단일기지로는 최대규모 오염

1) 용산미군기지 90건의 기름유출

그동안 알려진 기름 유출사건은 14건이었으나 한국정부가 공개하지 않는(혹은 모르는) 오염사고를 알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가 미국 정보자유법(FOIA)를 통해 ‘1990년~2015년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기록’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고건수는 8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 최악의 유출량으로 분류되는 3.7톤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7건, 심각한 유출량에 해당하는 400리터 이상의 사고가 32건이 있었다.



1990년 이후 최소한 94건 이상의 기름유출 사건이 용산미군기지 내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단일기지로는 최대규모의 오염사고이다. 그러나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기름 유출사고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2006년 한진중공업건물 전기공사를 위해 땅을 파는 도중 기름을 발견
그 해12월22일 캠프 킴에서 기름저장탱크를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몰래 외부로 반출하는 장면을 서울시 공무원이 한진중공업건물 옥상에서 찍은 사진

2) 밀빠진 독에 물붓기

2001년 1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 지하수가 대량의 기름으로 오염된 사실이 알려졌다.



미8군은 기름유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2001년 5월 주유소가 위치한 기지내 13곳에 관정을 뚫어 시추작업을 벌였고, 그 결과 9곳의 지하에서 휘발유 성분을 발견했으며, 그림과 같이 용산기지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의 오염도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2003년 4월 서울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녹사평역 터널 및 그 부지에 설치한 관측공에서 발견된 유종은 미군기지 내 관측공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JP-8 유종이며, JP-8은 녹사평역 주변에서는 주한미군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녹사평역 사고 당시 미군은 기지 내부의 오염원을 모두 제거하고 정화했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미군기지 주변으로 오염이 지속되고 있고, 서울시와 정부는 18년째 우리 국민들의 혈세 90억(매년5억원)을 들여 용산기지 주변을 정화하고 있다.

3) 2015, 16년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조사

2001년 충격적인 녹사평 기름유출사건이 발생하였지만 미군기지 내부조사는 10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못했다. 2003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는 한-미공동실무협의체에 내부조사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그 결과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녹사평역 인근 기지내부 오염조사가 실시되었다.

묵묵부답 문전박대

2013년 5월16일 오후 2시.

서울시 토양지하수팀 직원과 기술자 등 10여 명은 기지내부 조사요청을 위해 용산 미군기지 1번 게이트를 방문했다. 정문 앞을 지키던 미군은 “상부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울시 직원들은 공문이라도 접수하려 했지만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정문도 넘어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에 갔더니 민사관이라는 사람이 농담 삼아 ‘대한민국 힘이 세졌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지금은 이렇게 요청도 주장도 한다’

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미군측의 반대로 기지내부의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2017년 4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1차 결과 공개 후 2017년 11월 2, 3차 조사결과를 공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기지내부는 조사관정(지하수) 25개 중 17개가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한 지점은 기준치의 최대 672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되었다.

기지 외부도 34개 관정 중 12개 관정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기준치의 최대 470배를 초과한 벤젠이 검출되었고 TPH, 톨루엔 등 다른 검사항목도 기지내부와 유사한 오염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오염원인이 기지내부임을 알 수 있다.

□ 1차 내부오염 조사결과 (총 14개 관정 중 7개 관정 초과)

구분	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기준	15	0.015	1.0	0.45	0.75
최대 오염도	1.36	2.440(163배)	1.505(1.5배)	1.163(2.6배)	1.881(2.5배)

□ 2차 내부 오염 조사결과 (총 20개 관정 중 11개 관정 기준 초과)

구분	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기준	15	0.015	1.0	0.45	0.75
최대 오염도	17.6(11.7배)	8.258(550배)	7.614(7.6배)	2.415(5.3배)	8.118(10배)

□ 2차 외부 오염 조사결과 (총 34개 관정 중 10개 관정 기준 초과)

구분	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기준	15	0.015	1.0	0.45	0.75
최대 오염도	25.7(17.1배)	6.953(436배)	1.957(1.9배)	1.678(3.7배)	4.571(6.1배)

□ 3차 내부 오염 조사결과 (총 25개 관정 중 17개 관정 초과)

구분	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기준	15	0.015	1.0	0.45	0.75
최대 오염도	18.8(12.5배)	10.077(671배)	6.836(6.8배)	2.897(6.4배)	9.813(13배)

□ 3차 외부 오염 조사결과 (총 34개 관정 중 12개 관정 기준 초과)

구분	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기준	15	0.015	1.0	0.45	0.75
최대 오염도	9.5(6.3배)	7.051(470배)	2.661(2.7배)	2.199(4.9배)	6.083(8.1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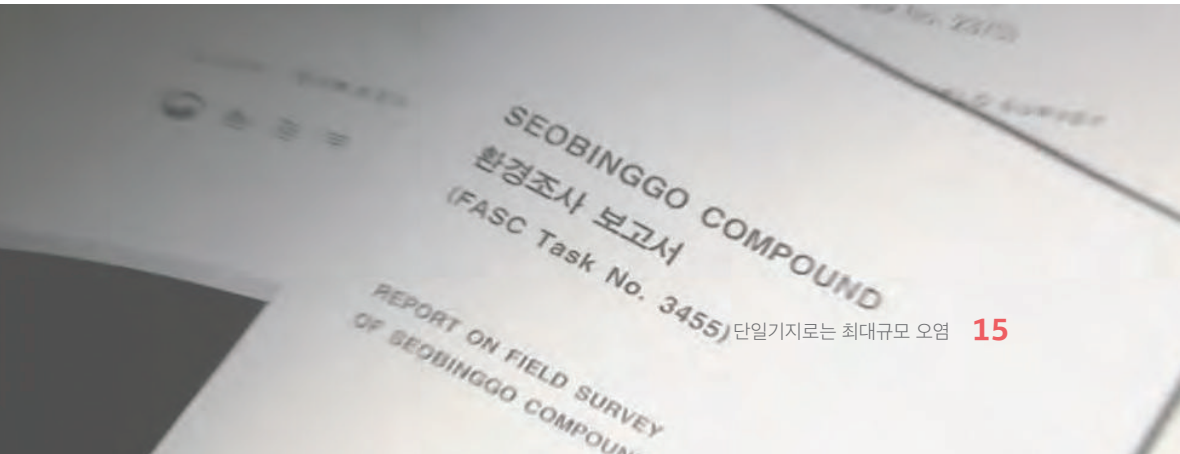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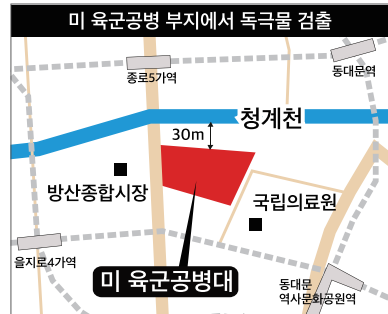
4) 2020년 서울지역 미군기지 환경조사 보고서 공개

서울 소재 미군기지 4곳에 대한 환경조사보고서가 최초로 공개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폐놀오염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독성이 강한 살균제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폐놀이 기준치의 7배가 넘게 검출되는 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육군 공병부지로 사용됐던 곳은 청계천에서 불과 3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인데, 이곳 지하수에서 기준치가 넘는 폐놀과 벤젠 등이 나왔고 토양에서도 각종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미군기지는 주택가, 초등학교 등 생활밀집지역에 인접한 곳으로 기지 내부가 이렇게 오염되었다는 것은 기지 밖 지하수, 토양 등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난 2002년에 미군 종교휴양소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인해 휴양소 인근 아파트 뒷마당을 시커멓게 물든인 바 있다.



5

오염은 주한미군이, 정화는 한국정부가

1) 키세란?

2000년 발생한 주한미군 한강 포름알데히드 방류 사건 등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2001년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 환경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때 도입된 것이 ‘키세KISE’ 기준이다.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즉 ‘인간 건강에 대한, 알려진, 임박한, 실질적인, 급박한 위험’으로
미군은 이 ‘키세’ 기준에 해당될 때에만
환경 정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키세’ 기준 자체가 정량적인 측정 기준이 아니라 ‘임박하고 실질적이며 급박한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주관적’인 기준이어서 검증 자체가 어렵다.

아무리 다이옥신이나 벤젠, 페놀 등과 같은 독성물질로 오염이 되어도 미군이 ‘키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군은 오염정화의 책임이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 미군은 기지 정화의 책임을 지고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



2)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

미군은 환경정화 책임에 대해 SOFA 제4조 1항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해당조항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사용으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에 대해 원상복구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이며, 2000년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또한 SOFA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은 ‘미국 정부는 한국의 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으나, 결국 미군은 KISE인 경우에만 오염을 치유할 것이며, 협상 대상 기지 중에 그 정도 수준의 오염은 없기 때문에 오염정화의 책임도 없다는 것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3) 독일보충협정은 달랐다!

1993년 개정된 독일보충협정은 미군기지내에서도 독일환경법규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해의 주둔미군기지 환경조사, 환경정화비용 부담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1999년 7월에 이뤄진 라인-마인기지 이전협상에서 독일은 ▲독일법에 근거한 환경정화기준을 설정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며 ▲환경정화를 위한 출입이 무제한 허용되며 ▲반환 후 확인된 환경과피도 미국이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기지 반환이 이뤄진 것이다.

독일보충협정 환경관련규정

환경양립성 조사(제54조 A)

1항 : 파견국은 독일 내에서의 군대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2항 : 본 협정에 따른 독일법의 적용과 준수를 저해함이 없이, 파견국 군대 및 군속당국은 가능한 한 일찍 모든 계획의 ‘환경양립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독일환경법규의 준수(제54조 B)

파견국군대 및 군속당국은 독일환경법규에 따라, ... 권한 있는 독일당국과 파견국군대 및 군속당국은 본 규정의 적용과 감시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제거비용의 부담 (제64조)

4항 (b) : 파견국군대와 군속당국은 위해물질오염의 할당/평가/구제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동 비용은 ‘독일법’에 따라 결정되며, 동 당국은 신속히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한미 SOFA에는 없는 규정

6

미군기지는 성역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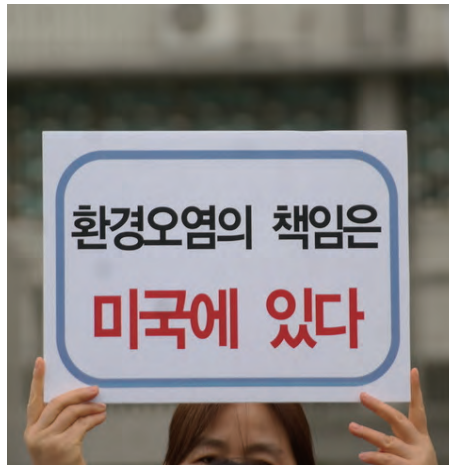
반환된 용산기지에는 용산국가공원이 들어선다. 이 공원은 우리 아이들과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될텐데, 이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때문에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가 시민들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만 홍보할 뿐, 오염이 얼마나 되어 있을지 모를 용산기지의 반환과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고 있지 않다.

지난 3월, 늦었지만 서울시민들의 노력으로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과 및 관리 조례안’이 만들어 졌다.

서울시는 조례안에 명시된 대로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시민의 인권, 생존권, 재산권, 환경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서울시장의 책무(5조)를 위반하지 말아야 하며, 조례안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미군측에게 환경정보를 제공(6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미군기지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승인을 받지 않은 한미 양측의 지침을 근거로 오염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이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보다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지자체를 비롯해 환경부 등 정부 당국은 적극적으로 미군측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오염 정화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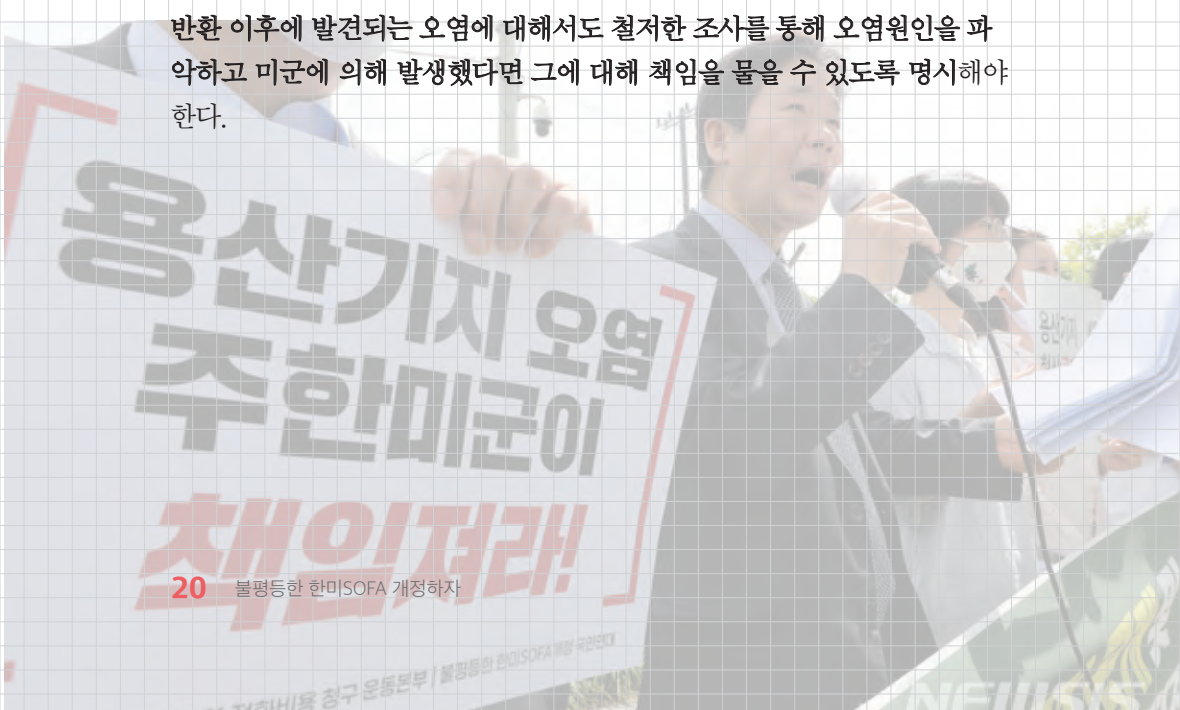
**첫째, 한미SOFA 본 협정에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미국이 기지 반환 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SOFA 제4조가 ‘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군기지 내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명확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추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미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조사 과정에서 가능성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반환이후에도 기지내 오염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

반환 이후에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오염원인을 파악하고 미군에 의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둘째, 환경오염 정보를 각 지자체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한미 SOFA협정의 부속서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는 한미 양측 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공동승인을 통해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알수가 없다.

기지 내부에 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한미군은 반드시 지자체와 환경부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기지 외부 오염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오염원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지 내부 조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용산기지
협상공개!
시민참여 보장!

셋째, 정화의 기준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미군측은 한미SOFA 규정에 명시된 ‘인간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정화 기준으로 주장하며 오염정화의 책임을 회피하고 반환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NATO-SOFA 독일보충협정」과 「라인마인기지 반환협정」 사례와 같이 한국 국내 환경법이 미군기지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와 비용부담의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화 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해야 한다.



8

누더기 공원을 만들것인가?

1) 공원 한가운데 미군 호텔이 있다!

드래곤힐 호텔은 군부대시설과는 상관없는 편의시설로 사우스포스트 북쪽, 1번 게이트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

드래곤힐 호텔이 잔류하게 되면 새로 조성될 용산국가공원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며, 마치 용산공원은 드래곤힐 호텔의 정원처럼 활용 될 것이다.

더군다나 드래곤힐 호텔은 미군재향군인회가 소유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준 미군기지 내에 있는 호텔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출입방호부지는 국방부 건물 부지와 드래곤힐 호텔을 잇는 공간으로



이는 군시설이 아닌 드래곤힐 호텔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점 등에서 매우 논란이 되고 있으며, 미군이 사용하던 헬기장이 국방부로 반환되었지만 여전히 미군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그 소음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 미대사관 이전

지난 2010년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 부지에 최고 12층 높이의 미대사관 청사·직원 숙소·기타 시설을 짓는 방안에 대해 미국 측과 잠정 합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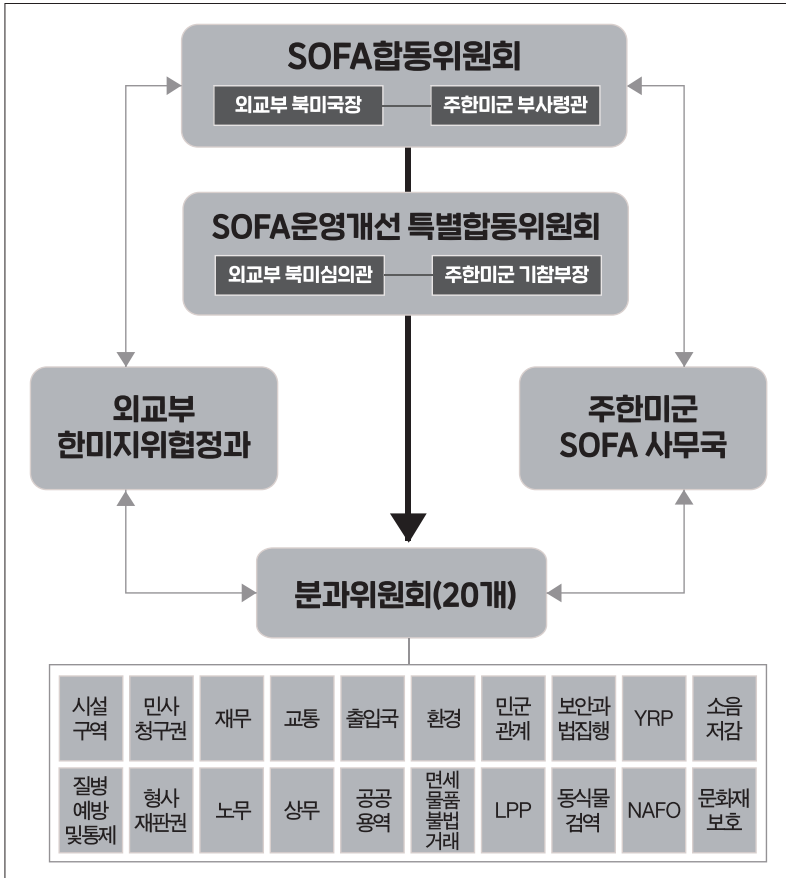
대사관 이전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는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내렸으며 협소한 접근 도로를 확장해주시기로 하는 등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



미국대사관이 용산공원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것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초입에 들어서게 된다. 용산공원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공원인지 미국을 위한 공원인지 알 수 없으며, 누더기 공원이 될 것은 눈에 뵈어진다.

반환 될 용산미군기지를 온전한 용산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드래곤힐 호텔을 비롯해 잔류부지와 미대사관 이전부지에 대해 재협상해야 한다.

■ 한미SOFA 운영체계



■ 서울대책위 활동일지

○ 2017년 9월 19일

-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 시작
- '깨끗이 치우고 깨끗이 나가라' 용산행진 45일간 진행(연인원 1,000여명)

○ 2019년 3월 15일

- 반환 유엔사 부지 환경오염 미국 규탄 기자회견

○ 2019년 7월 9일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선포식
- 운동본부 대표 제안자
 - ▲ 조현정 (예수살기 상임대표, 전 향린교회 상임대표)
 - ▲ 이장희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

○ 2019년 10월 21일~29일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 운동
- 이장희 대표 외 180명 / 소개의원 권수정 의원

○ 2019년 10월 30일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 접수

○ 2019년 12월 5일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토론회
- 공동주최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 2019년 12월 11일

-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
-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 폐쇄 미군기지 즉시 반환 합의 및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

○ 2019년 12월 12일

- 4개 미군기지 반환 합의 및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 개시 발표에 따른 주한미군 면죄부 주는 굴욕적인 반환기지 협상 규탄 기자회견
- 공동주최 :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청구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는온전히찾기주민모임

○ 2019년 12월 16일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 서울시의회 제 290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

○ 2019년 12월 6일~2020년 1월 13일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 및 온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진행

○ 2020년 1월 16일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 공동주최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 2020년 2월 4일

-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 발의(대표발의 김기대의원)로 접수

○ 2020년 3월 6일

-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통과

○ 2020년 4월 23일

- NCS삼임위원회(20.4.23) 결과

: 용산기지이전계획(YRP),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반환계획을 검토하고, 토양오염 정화협상은 미측과 계속 이어가되, 22개 미군기지(공병단 부지, 용산기지 일부 포함)의 반환은 연내 마무리

○ 2020년 5월 7일

-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토양지하수와 과장과의 통화를 통해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공동환경평가절차가 개시되었으 며 곧 현장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며, 미군측과 협의중이기 때문에 조사일정등은 공개 할수 없다는 답변 들음

○ 2020년 5월 15일

- 공동환경평가절차 일정 및 환경조사 일정과 조사범위, 공동환경평가 준비단계 회의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음

○ 2020년 6월 4일

-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 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

○ 2020년 6월 9일

-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청구 운동본부, 서울민중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녹색연합, 서울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촛불대항정범국민협의회, 촛불민심관찰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유라시아평화의길,국민주권2030포럼, 범민련 남측본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연방 시민회의

○ 2020년 6월 8일~19일

- 용산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앞 일인시위

○ 2020년 7월 19일

-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전국연석회의 참가
- 서울, 평택, 부산, 대구, 경남 등 참가

○ 2020년 10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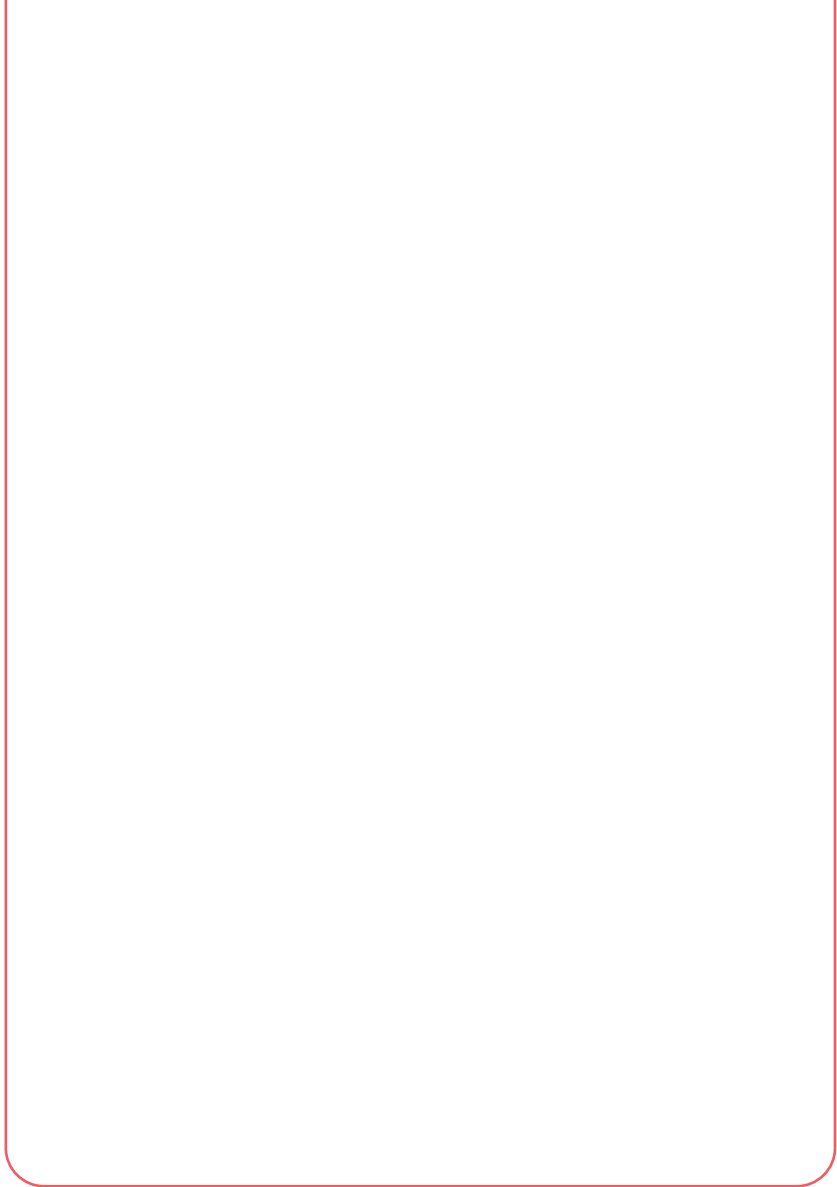
-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 촉구 기자회견
- 공동주최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 청구운동본부, 미군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전국연석회의

○ 2020년 10월 16일

-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준)으로 전환

○ 2020년 10월 29일

- 청계천 부근 독극물 웬말이나! 서울지역 미군기지 오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금기의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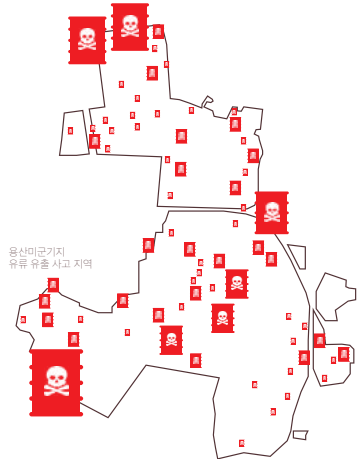
담벼락이 둘러싼

들어갈 수 없는

있지만 없는 땅

이제는 온전히 되찾아야 한다.

용산미군기지 반환 어디까지 왔나?



용산미군기지 안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준)

후원 : 민주노총 서울본부

홈페이지 www.yongsan-clean.com

후원계좌 신한 131-017-431413 김지혜(용산클린)